

# “최순실, 국정교과서는 손 안땀을까?”

### 김승환 교육감 “이런 나라 우리 아이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미안... 교육부, 진실 밝혀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중 국정교과서는 손 대지 않았을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말하며 “어떻게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들 앞에서 ‘이것도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개탄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권, 대통령의 연설, 외교, 안보, 남북관계 등 전방위에 걸쳐 최순실씨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순실 씨가 교육에 손을 댄 건 없었는지 의구심을 표했다.

김 교육감은 “역사를 잘 모르는 국민은 혼이 없다”라는 사면적인 언어가 등장했지 않나”라며 “교육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가 말 그대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저 그런 교과서 만들기 작업인지, 아니면 ‘최순실 교과서’, ‘사면 교과서’, ‘정권교과서’ 만들기 작업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혹시라도 교육부가 진실을 끝까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최순실 진실도 드러나고 있다. 무슨 힘으로 교육부가 그것을 막겠냐”라고 지적했다.

또 이름을 숨긴 채 집필 작업을 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들에게도 “오늘이라도 복면을 벗고 광명한 세계로 나오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우리 교육계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복면 교과서가, 사면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동하는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검찰직원에 둘러싸여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최소한의 ‘수오지심’도 없는 고위 공직자들, 권력자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지역의 교육감으로서 이런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

럽고 미안하다”면서 “더 추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고민형 기자

민주당, 최순실·안종범·김기춘·김종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선 비선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 중 문체부 제2차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씨를 비롯해 국가기밀 유출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국외재산도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범인도피은닉죄 등의 혐의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은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강제 모금해 미르재단 등의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및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압력을 가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김중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요구했다. /뉴시스

문재인 “새누리당 추천 총리로 무슨 거국내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치권의 거국내각 구성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총리를 추천하는 내각이 무슨 거국중립내각이냐”며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제안을 ‘뽀수’로 규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개인 입장 발표문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국면을 모면하고 전환하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를 추천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며 “자극의 사태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다. 새누리당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동책임이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석고대죄 하면서 자숙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거국중립내각은 새누리당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몇몇 유력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이 김중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총리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서도 마땅찮은 반응을 보였다.

그는 “따라서 거국중립내각이 되려면 박 대통령이 총리에 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그리하여 새 총리의 제정으로 새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박 대통령이 야당에 ‘정중한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일갈했다. /뉴시스

민주당 도당, 법률고문단 위촉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31일 도내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임명,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단장을 맡고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유길정, 김성희, 이삼일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2년 간 선거법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도당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도당은 어수선한 정국 속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적극 구할 예정이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을 통해 폭넓고 현실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자문단이 도당과 지역위원회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 ‘삼성 새만금 투자 파기’ 규탄 양용모 도의원 3차 1인 시위

### 삼성본사 앞에서... “삼성의 반성과 후속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이 서울 강남역 삼성본사 앞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 파기’ 규탄 3차 1인 시위에 나섰다.

양 의원은 31일 “세계일류 기업 삼성이 새만금 투자 파기로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현실팽처럼 버렸다”며 비난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24일 도내 국회의원 10명이 삼성 새만금투자 MOU 철회와 관련해 삼성사장단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실효성 없는 간담회로 진행돼 삼성의 반성과 함께 후속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3

차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새만금 투자 MOU 약속을 저버린 삼성에 면죄부만 주는 실익 없는 간담회 결과를 초래해 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어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따져 묻기 위한 것이다.

양 의원은 “지금이라도 삼성과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서둘러 이행할 대책과 방안을 도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이정현, 사퇴 거부... “어려울 때 도망이 가장 쉬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어려울 때 그만두고 물러나고 도망가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쉬운 것”이라며 비박계 의원들의 지도부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를 포함한 어떤 지도부 구성원도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책임을 맡은 자리에 나설 때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선장처럼 배가 순탄할 때든 순탄하지 않을 때든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각오와 신념과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지도부가) 나서서 당원들이 신뢰를 줬다. 지금은 일단 난국을 수습하는 데 최선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직을 내놓기로 한 김현아 대변인과 오신환 홍보위원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당직 사의 표명이 나올 경우에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BUAN 600th Anniversary  
1416-2016  
부인 정명 600주년 행복부안! 천년도약!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